

농업·교통·인프라에서의 경제협력 확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기업활동 지원 '이중과세방지협정' 조속 타결키로·평화 위한 양국 협력 방안도 언급

문재인 대통령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지난 15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자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 양국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업·교통·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총리실 서명식장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우리는 양국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이번에 '형사사법공조조약' 문인이 타결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해당 조약은 협정 당사국간 형사 사건에서 상호 공조를 통해 양국의 수사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오가고 체류하며, 양국의 거리를 가깝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 정상의 캄보디아 방문은 10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훈센 총리님과 나는 양국 관계를 더욱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양국이 함께 상생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양 국민 우호 증진 ▲경제 협력 확대 ▲역내 평화 위한 협력 ▲한·아세안 관계 도약 방안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확대해 양국의 상생번영을 촉진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양국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지난 15일 프놈펜 캄보디아 총리실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정'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인프라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밖에도 "식품가공·에너지·ICT·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과 기술협력을 통해 양국의 공동 성장 기반을 함께 열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캄보디아 내 도로와 댐을 건설하며 아세안의

연계성 증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인프라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밖에도 "식품가공·에너지·ICT·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과 기술협력을 통해 양국의 공동 성장 기반을 함께 열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캄보디아 내 도로와 댐을 건설하며 아세안의

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앞으로도 내전을 극복해낸 캄보디아의 지혜를 나누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훈센 총리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하는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 대통령의 방문

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양자적인, 다자적인 프레임 워크 하에 (양국)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여기에는 무역·투자·농업·금융·산업·관광 그리고 교육 분야까지 망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은 양자적인 무역 규모를 더 키워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또 "캄보디아의 제품의 시장 확대 노력, 특히 양자 무역 규모를 키워서 양국 경제 잠재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며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 양 정상은 더 나은 투자환경을 캄보디아에 조성할 필요를 느꼈고 산업 발전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경제 다각화 성공을 다짐했다"고 했다.

훈센 총리는 이외에도 보건·교통·인프라·에너지·교육·정보통신 기술·무역 투자 등의 분야에 협의를 도출한 점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하고 인적 연계성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선 캄보디아 근로자 송출 관련 분야 논의도 이뤄졌다.

또 "국제·역내 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한·아세안, 한·메콩, 한반도 문제 관련 협력 그리고 같은 관심 가진 이슈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메콩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데 대해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양국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격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

저소득 구직자에 6개월 급여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규모 상반기 확정
정부, 상반기 중 법률안 마련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계획을 구체화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변화에 대비하고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되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 급여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현행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51만 2102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는 구직 활동에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6개월간 5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행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조속한 재취업과 실직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월 일정금액의 구직촉진수당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계획을 구체화 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적 합의 결과에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소요인력 등을 상반기 중에 확정해 2020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중에 일일임,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내년부터 중고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정부, 2019~2013 첫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학생들의 건강 관리에 손을 얹어볼 것이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에는 국가가 따로 관리하지 않던 유치원생과 대학생도 건강 실태 조사가 나선다.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저출생 시대에 학생 한 명 한 명을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 만들어졌다.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등 12개 부처가 함께 참여했다.

◇4명 중 1명은 비만... 고도비만 전문기관 연계해 치료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실시하는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1.8%에서 해마다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실시해 결과

를 알려주고, 학교교육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고도비만인 학생은 학교 밖 전문기관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중등도비만에 해당하는 학생은 지역사회와 함께 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나 석면 등 환경상 위험요소를 줄이는데 힘쓰기로 했다. 감염병이 번지지 않도록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렴결손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고생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학생 정신건강 적신호...학업 부담 등으로 우울증 늘어
과중한 학업 부담을 비롯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해지면서 학생들의 우울증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우울감을 경험한 중·고등학생 비율이 2017년 25.1%에서 1년새 27.1%로 늘어났다. 정부는 우울감과 충동조절 장애, 자살·자해 등 정서·행동 이상 문제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고 봤다.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시간이 늘어나, 인터넷과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

하거나 중독되는 증세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상담창구를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24시간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화(1661-5004)로 상담할 수 있는 문자·사이버 상담망 '다들어줄 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모바일 문자상담(#1388) 및 사이버상담(Cyber1388) 채널도 마련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1인당 연간 300만원 내 치료비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